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6개 분야 15개 의제 제안

분야	구분	의 제
기후에너지	1	기후위기 대응
문화	2	신규 대규모 공연시설 운영의 거버넌스 구축과 재원마련
시민안전	3	노후원전(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저지
	4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5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6	녹조독 해결을 위한 보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도시계획, 도시개발	7	황령산 유원지 개발 철회
	8	북항 제1부두 재개발과 유네스코 등재
	9	부산의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10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 공원 보존
교통	11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부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
지역경제, 노동	1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백전 예산 확대
	13	산업재해·중대재해 없는 부산만들기
	14	부울경경제동맹 성공적 안착을 통한 부울경메가시티 실현
	15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 계획

1. 행정사무감사 대응 의제 간담회

- ◆ 일 시 : 2023년 10월 19일 (목) 오전 10시 ~ 12시
- ◆ 장 소 :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6층
- ◆ 참 석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운영위원회

2. 행정사무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

- ◆ 일 시 : 2023년 10월 30일 (월) 오후 2시
- ◆ 장 소 : 부산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 ◆ 내 용 : 6개 분야 15개 의제 제안

3. 부산광역시의회 간담회

- ◆ 일 시 : 2023년 11월 첫주
- ◆ 대 상 :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 건설교통위원장 · 해양도시안전위원장 · 기획재경위원장
- ◆ 내 용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제안 의제 설명 및 전달

4.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 ◆ 일 시 : 2023년 11월 8일 (수) ~ 20일(월)
- ◆ 내 용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소속 단체별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방청 모니터링 및 일지 작성

5.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결과 발표

1. 기후위기 대응

의제	부산시 기후위기 대응																											
소관위원회/담당부서	복지환경위원회 · 기획재경위원회 / 환경물정책실 · 미래산업국																											
현황 및 배경	<p>○ 부산시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으로 4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 이 계획의 명칭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톤CO2eq)</p> <table border="1" data-bbox="391 593 1401 728">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전환</th> <th>산업</th> <th>건물</th> <th>수송</th> <th>폐기물</th> <th>흡수원</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2018</td> <td>26,747</td> <td>3,484</td> <td>7,750</td> <td>9,464</td> <td>5,110</td> <td>674</td> <td>-</td> <td>265</td> </tr> <tr> <td>2030</td> <td>14,176 (△47%)</td> <td>484 (△86.1%)</td> <td>5,192 (△33%)</td> <td>6,416 (△32%)</td> <td>3,168 (△38%)</td> <td>-1,114</td> <td>-126</td> <td>186 (△29.8%)</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자료: 부산광역시(2022),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부산 비전」</p>	구분	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기타	2018	26,747	3,484	7,750	9,464	5,110	674	-	265	2030	14,176 (△47%)	484 (△86.1%)	5,192 (△33%)	6,416 (△32%)	3,168 (△38%)	-1,114	-126	186 (△29.8%)
	구분	계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흡수원	기타																			
	2018	26,747	3,484	7,750	9,464	5,110	674	-	265																			
	2030	14,176 (△47%)	484 (△86.1%)	5,192 (△33%)	6,416 (△32%)	3,168 (△38%)	-1,114	-126	186 (△29.8%)																			
	<p>○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으로 인해 부산시 또한 「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중간보고가 완료된 상황임. 기본계획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적용되며, 지자체 관리권한 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다시 산정한 상황임. 이에 전환(발전), 산업 분야는 부산시가 감축해야하는 양에서 제외가 됨</p>																											
<p>○ 2018년 기준 부산시 관리권한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62만 7천970t CO2eq이며, 중간보고 시 2030년까지 '37%+α'로 감축목표가 제시된 상황임(약 615만 2천349t의 감축량)</p> <p>- 분류 : (산업) / 건물 / 수송 / 농축수산 / 폐기물 / 수소 / 흡수원 / CCUS / 국제감축</p> <p>- 4대 전략 : 전략적이고 과감한 저감으로 주도적 탄소중립 / 신기술·미래산업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 모두가 함께하는 공정전환으로 실천형 탄소중립 / 글로벌 해양수도 도약으로 선도적인 탄소중립</p>																												
<p>(1) 부산시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의 상향과 성실한 이행 필요</p> <p>○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에서 「1차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으로 변경으로 인해 기존의 감축 목표량 2030년까지 47% 감축에서 2030년까지 37%+α로 수정됨.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의 감축목표인 최소 40% 이상 부산시 차원에서 감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함</p> <p>○ 2022년 부산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93만7천818t으로 목표(109만6천208tCO2eq)대비 85%에 그침. 감축목표를 성실하게 이행할 필요</p> <p>(2)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대응 기금(안) 확충 및 민관협의체 구성 필요</p> <p>○ 현재 기후대응 기금 마련을 위한 부산시의 계획은 : 300억(2025년) ⇒ 500억(2030년) ⇒ 1,000억(2050년)으로 석탄보일러 1기 교체 수준임</p> <p>○ 부산의 산업구조를 보면 금속 가공 및 섬유, 기계 등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업종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재편이 필요함</p> <p>(3) 건축물의 저조한 그린 리모델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제일 많은 비중(35.38%)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 중, 특히 노후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절실함 ○ 2020년 기준 부산광역시의 노후건축물은 63.6%로, 서울 다음으로 높음 (※ 전남(61.2%), 대전광역시(59%), 대구광역시(57.3%), 경북(57%)) <p>(4) 전국 최하위의 재생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 실현 단위인 지자체, 민선 8기의 방향 설정과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지만, 부산의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은 가장 낮은 상태임 ○ 2025년 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전국 최저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개 도시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경기(2.7%), 부산(2.9%), 서울(6.1%), 대구(9.1%), 세종(41.3%), 전북(49.4%), 제주(56.7%) (출처:산업통상자원부) ○ 24년 정부의 R&D사업 예산 삭감으로 부산의 수소모빌리티 연구개발 예산이 59%(15억 4000만원)삭감된 상황 ○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 시내버스 수소버스 교체사업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사업에는 적극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와 현대자동차와 협력하여 2025년 까지 수소버스를 1천대 확대 계획하였으나 현재 수소충전소 3곳(사상구, 강서구, 기장군), 23년 4곳 완공예정(해운대구, 기장군, 강서구, 영도구), 25년 동부산권 3곳, 서부산권 1곳이 건립될 예정 <p>(5) 에너지 전환 및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의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도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총괄적 예산과 계획을 진행하기 어려움 <p>(6) 4·5종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통합 관리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등) 및 온실가스의 배출의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하는 제조업체이나, 그 배출량 산정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특히 4·5종 사업장, 도장시설, 금속제조시설, 선박부품제조시설 등의 발생량 및 현황조사가 부족(CAPSS 자료에는 4·5종 사업장 누락)한 상황으로, 체계적인 인벤토리구축 및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가 제시한 감축 목표치의 상향과 성실한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감축목표 상향 (37%+α => 40% 이상) - 감축목표 성실한 이행 및 이행사항 모니터링 강화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기후인지예산제 운영 및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저감 기술지원 및 산업전환을 위한 예산지원 · 이를 위한 기후기금확대 ○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설치 및 민관협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전환은 밀접한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므로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시장직속 기후환경에너지 총괄부서 마련

- 에너지정책을 전담할 부산통합에너지센터를 시민협업을 통해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확충
- 부산광역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기후위기대응 워킹그룹' 운영
- 부산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산학연 실무협의회 운영

○ **재생에너지·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과감한 투자**

- 부산형 FIT, 에너지 협동조합 지원, 인허가 절차 간소화, 해상풍력 및 태양광 재생 에너지 참여의 주민참여·지분 보장 정책 마련
- 공공기관의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2030년까지 50% 이상) 및 민간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이자 지원뿐 아니라 사업비 지원까지 확대
-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사업 추진(인천의 경우 검단 주택건설사업을 제로에너지 주거단지로 구현할 예정으로 밝혔으나 부산은 2050년 까지 신축 건물의 경우 자체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자급하는 ZEB의무화)
- 노후건물에 대한 대책 마련 및 과감한 투자

○ **재생에너지 자립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25년 35%이상 대폭 확대
(부산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2030년까지 20%, 2050년까지 50%)
- 재생에너지 실증사업 구조 단순화
- 공공성을 확보 및 지역주민수용성을 반영한 해상풍력 발전사업, 수소충전소 건립 시행
- 유희부지(주차장 등) 태양광 의무화법 추진 / 주차장, 옥상 등 일정규모 이상의 유희부지(서낙동강, 경마장, 에코델타 수로 활용 등)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 유희부지 소유,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게 RE100이행 요구
- 태양광 보급을 위한 산단 건축물구조진단비용 지원
- 신규산업단지 계획 시 재생에너지 산업 구성(예. 제2센텀 산업단지)

○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4·5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를 통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통합 관리
- 부산시 차원의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 **탄소흡수원 확대**

- 낙동강 하구, 연안습지 난개발 금지로 블루카본 보존 및 확대
- 황령산, 이기대 난개발 금지
- 금정산 국립공원지정과 도심 숲 조성 확대
- 가로수 확대 및 과도한 가지치기 금지

2. 신규 대규모 공연시설 운영의 거버넌스 구축과 재원마련

의제	신규 대규모 공연시설 운영의 거버넌스 구축과 재원마련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행정문화위원회 / 문화체육국
현황 및 배경	<p>○ 오페라하우스 및 국제아트센터 기본현황</p> <p>*오페라하우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페라하우스 준공 및 개관 : 2026년 상반기(현재 공정률 40%) - 위 치 : 북항재개발사업지 - 규 모 : 대지면적 29,542㎡ 연면적51,617㎡(지하2층/지상5층) - 주요시설 : 대극장(1,800석) 블랙박스극장(300석) 리허설실 카페 레스토랑 등 - 총사업비 : 3,117억원 (<u>2021.6. 총사업비 증액 2,500억->3,050억(공사515억, 감리12억, 부대비23억) / 2023.2. 총사업비 증액 3,050억->3,117억(공법검증66억, 조사용역1억)</u>) <p>*국제아트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아트센터 개관 : 2025.5.(2024.6. 준공, 현재 공정률 56%) - 위 치 : 부산시민공원내 - 규 모 : 대지면적 29,408㎡ 연면적 19,862㎡(지하1층/지상3층) - 주요시설 : 콘서트홀(2,000석) 챔버홀(400석)등, 총사업비; 1,013억원(국 463, 시493, 부지57) <p>○ 오페라하우스 총사업비 확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그룹 1000억원 기부협약 완료 - 부산시 시비 1617억원 연차적으로 확보예정 (총사업비 증액으로 1550억->1617억으로 증액) - <u>부산항만공사 500억 -> 해수부, “오페라하우스 500억 지원 못해”</u> (2023.10.19./뉴스데스크/부산MBC) <p>○ 오페라하우스 운영경비 확보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추산 연간운영경비 150억원 중 부산시 지원금 90억원 (부족분 60억원 확보계획 부재) <p>○ 부산 오페라하우스 운영에 시민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는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공부터 개관, 운영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힘 - 운영협의회는 콘텐츠, 극장운영, 기술등 3개분과에 시민과 지역예술인, 관계전문가 등 30여명으로 구성(2019.01.30./서울경제) - 현재 운영협의회는 임기가 끝나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부산시 문화시설 개관준비과에서 확인해 줌 <p>○ 부산시 감사위원회,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오페라하우스 특정감사 분야는 ①시공 ②계약 및 안전 ③설계 ④자문위원회 등 4개 분야이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사·감리단·발주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을 적발함 • 그에 따른 ▲행정상 조치는 21건으로 주의 11건, 통보 10건이며, ▲신분상 조치는 18건으로 징계 3건, 훈계 7건, 주의 8건임 • 공사관계자(시공사·감리단)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과징금·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발주청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시행할 예정임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건립과정에서 공법문제로 상당한 잡음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7월27일 발표된 부산시감사위원회의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잘 드러나 있음. 감사 결과에서 밝힌 위법 및 부당한 사항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책임자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 부산시가 밝힌 총사업비 3,117억원의 확보방안 중 부산항만공사의 500억 원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확보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여야 함 ○ 오페라하우스 건립 이후 연간 운영경비(부산시 추산 연간 150억원)의 확보방안을 명확하게 마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 운영경비 등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투입되는 재원의 상당부분이 시민들의 세금인 만큼 더 이상은 시의 운영부실로 인한 재원낭비가 있어서는 안될 것임 ○ 지역 문화예술계와 지역 전문가는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신규 대규모 공연장의 운영을 시민과 지역예술인,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 참여형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반논의 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공개되어 이후 추진방향과 계획수립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함

3. 노후원전(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저지

의제	노후원전(고리 2,3,4호기) 수명연장 저지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현황 및 배경	<p>○ 노후원전 수명연장 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석열 정부는 2030년 이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고리 2~4, 월성 2~4, 한빛 1~2, 한울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추진 중임 - 한수원은 22년 4월 고리2호기, 9월에는 고리3·4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2년 하반기 고리2호기 그리고 23년 상반기에 고리3,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시민사회의 저항이 있었음 - 방사선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의 접근성 및 가독성이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되었음 <p>○ 노후원전 수명연장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리2호기 및 3,4호기와 같은 노후핵발전소는 신규원전과는 달리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고 중대사고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음 - 최근 동해안 지진을 비롯해 크고 작은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지진보고서에 의하면 경상권에는 16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기초조사가 확대 되어야 함 - 부산과 울산은 전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340만명이 거주하고 있음 - 기후위기시대에 핵발전소의 방벽은 해일을 예방하지 못하고 비상디젤 발전기는 자주 정전되거나 가동되지 않아 노후원전은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음 - 부울경 시민들과 함께 안전성과 수용성을 검토하지 않음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에 의하면 설계수명 연장은 금지되어 있으며 설계 변경 및 방폐물 처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주민의견 수렴이 전제이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건의 및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임 <p>○ 영터리 환경영향평가 및 수명연장 심사가 진행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수원은 원전규제지침 NUREG-0555와 1555를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편의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하고 있음 (*NUREG는 미국NRC(원자력규제위원회) 지침임) - 스리마일섬 및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추가요건 40~60가지를 반영해야 하는데 적용이 전혀 적용되지 않음 - 고리 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해 중대사고가 반영되어야 하며 중대사고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특히 화재위험도 등 안전정지분석 및 증기발생기 세관파단사고, 소외전원상실 및 냉각제상실사고 분석 평가 등은 필수적이거나 현재 부분적으로만 실시하고 있음 - 미국NRC 표준규제지침(SRP-0800)의 15장과 19장이 편의적으로 부분, 선택적으로 반영됨 - 지진 취약도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 - 안전성 평가 중 규제지침(RG) 1.7과 지진 위해도 평가 RG 1.206이 적용되어야 하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

제안	<p>○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제도 보완 요청 -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로 하여금 방사선환경영향평가(RER) 분석 및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보완이 요구됨 - 혼용 및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원전규제지침을 NUREG-0555에서 NUREG-1555로 통일하여 적용하는 등 명확히 해야 함</p> <p>○ 시민의견 수렴 및 시민안전특위 제대로 운영 - 시민이 수명연장의 안전성 및 수용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 등 공론화 및 시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 부산광역시의회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구성 및 운영이 요구됨 (현재 시민안전특위의 위원장은 기장군 출신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배되므로 교체가 요구됨)</p> <p>○ 원자력안전 조례의 충실한 이행으로 수명연장 저지 - 부산시는 원자력안전 조례 5조 정책기본원칙이 이행되도록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저지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함 - 이를 위해 타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산자부가 제대로 한수원을 관리감독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 부산시는 원자력안전 조례 제9조(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노후원전의 안전 및 방사선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4.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의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 시설 저지 및 대마도 핵폐기장 대응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현황 및 배경	<p>○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28일 한수원은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상 건식저장시설을 2030년까지 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0월내 이사회에 상정 예정으로 있음 - 그러나 최근 황보승희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서울시 및 경기도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여기에 보관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은 인구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고리 원전에는 현재도 고준위핵폐기물 8000여 다발이 저장돼 있으며, 노후원전(2·3·4 호기)의 계속운전이 되면 고준위핵폐기물도 늘어날 전망이다 - 핵폐기물 처분은 핵발전소 지역뿐만이 아닌 전국의 사안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전력사용량이 높은 수도권의 책임 분담이 필요함 <p>○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대마도)에 핵폐기장이 추진중에 있어 부산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재정 지원금을 위해 핵폐기장을 유치하고자 함 : 시의회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유치 과정에서 정부의 문헌조사에만 응하더라도 최대 20억엔(한화 약 183억 원)의 교부금이 지역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쓰시마섬에 핵폐기장이 건설된다면 특히 부산은 사실상 고리핵폐기장을 비롯해 2개의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제안	<p>○ 고준위 핵폐기물법 폐기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및 시민들이 참여하여 논의하고 심의 할 수 있는 기구가 미비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현재 계류중인 고준위핵폐기물법은 폐기되어야 함 -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핵폐기물 임시 및 중간, 최종 처분장까지 예정지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핵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를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p>○ 원자력안전 조례의 충실한 이행으로 핵폐기장 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는 원자력안전 조례 5조 정책기본원칙의 이행을 위해 한수원이 강행하고 있는 부지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를 선언하고 요구해야 함 - 부산시는 산자부가 한수원을 관리감독해 나갈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함 - 부산시는 원자력안전 조례 제9조(원자력안전 시민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시민검증단을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노후원전의 안전 및 방사선 모니터링 활동 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게 고준위핵폐기물 분담 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는 전력사용량이 높은 수도권,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에 임시저장

	<p>시설을 건립하고 고준위핵폐기물을 인구수에 따라 보관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여야 함</p> <p>- 특히 서울, 경기도에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핵폐기물 분담의 고통을 요구하면서 탈핵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야 함</p> <p>○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 적극 대응</p> <p>- IAEA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건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적 갈등과 안전의 위협에 관한 국제적 금지조항 등이 담긴 논의구조를 만들고 협약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함</p>
--	---

5.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의제	후쿠시마 핵오염수 저지
소관위원회/담당부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시민안전실
현황 및 배경	<p>○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차 방류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 찬성 및 허용 입장을 유지 중임 - 일본 오염수 투기로 인해 초콜릿 등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23년 8월 24일 1차 방류 7,788t / 23년 10월 23일 2차 7,810t 방류됨. 현재 기준 총 1만 5,6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투기된 상황임 - 이번 2차 투기에서는 삼중수소(트리튬)농도가 최고치 검출되어,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당 22Bq로 확인됨 <p>○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 현 등 9개 지역의 수산물의 수입이 금지 중이나 일본은 금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 일본 수산물뿐 아니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수입 금지, 일본 전 지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요구되는 상황임 <p>○ 방사성 오염 식품의 급식 사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금지하는 조례 제정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학교 및 공공급식 등 지자체가 직간접 관리하거나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학교, 공공기관 구내식당 등) 및 단체(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에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조례'가 제정되고 있음 - 2023년 8월 현재, 7개 광역지자체, 20개 기초지자체, 16개 교육청 등 총 43개 자치단체가 식품의 급식사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금지하는 조례가 있음 - 부산은 영도구 및 해운대구 지역주민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10월 중 본 회의를 통해 통과될 예정으로 있음
제안	<p>○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건의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형준 시장은 윤석열 정부에게 지금이라도 당장 핵오염수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해야 함 <p>○ 런던협약 등 국제기구를 통한 오염수 투기 저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에 의하면 어떠한 준위의 핵폐기물도 해양에 투기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런던협약을 근거로 일본정부가 런던협약을 지킬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함 - 이를 위해 부산시는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압박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함 <p>○ 일본 수산물 금지 확대 및 수산 가공품 금지 확대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진행중인 9개 현의 수산물 금지에서 일본 전역으로, 그리고 수산물에서 수산 가공품까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윤석열 정부가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부산시가 건의하고 촉구해야 함 <p>○ 시민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제도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기초 지자체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조례' 제정이 요구됨
--	---

6. 녹조독 해결을 위한 보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의제	녹조독 해결을 위한 보개방 및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소관위원회/담당부서	기획재경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시민안전실·환경물정책실
현황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이 8개의 보로 흐르지 못하는 가운데 녹조 독이 농수산물에 이어 수돗물, 공기에서 까지 검출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2월·3월 낙동강 노지 재배된 쌀, 배추, 무에서 MC(※마이क्र로스틴, 인체의 아미노산 대사의 심각한 장애 및 신장 손상 위험) 축적이 확인되어 농업용수의 안전성 및 부산경남 먹거리에 대한 전수조가사 필요한 상황임 - 2022년 부산지역의 수돗물에서도 녹조 독 검출 및 낙동강 인근의 주택가에서 공기 중에서 남세균이 미국 강의 최대 523배 검출됨 - 2022년 부산의 다대포해수욕장에서도 마이크로시스틴(10.06 ug/L)과 뇌질환을 유발하는 BMAA(1.116 ug/L)이 검출되어 해양오염으로 이어졌음 ○ 친수시설의 녹조독이 검출되는 가운데,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다양한 기준 마련 및 홍보방안이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물금매리 및 삼락생태공원 강변 등 유아들 체험활동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 낙동강 원수 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부산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부산시의 취수원다변화사업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년 6월 수돗물에서 남조류가 원인으로 보이는 수돗물 악취사건 및 10월 초에도 녹조 관심단계가 발령되었음 - 미량유해화학물질 유출사건사고가 많은 가운데 윤정부의 공단 확대 정책이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경남 김해의 매리 공단 등 하류지역의 산업단지 확산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이 강화되어야 함 - 부산시의 취수원다변화사업이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난관에 처해 있는 상화에 있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수돗물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이 취수원 이전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함 - 윤정부의 공단 조성계획에 반대하고, 이를 건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과학적 관리방안 마련이 요구됨 - 수돗물의 녹조관리를 남조류 세포수에서 농도로 바꾸고 조류경보제 개선이 필요함 (채수 위치 및 채수방법에 있어 4km, 상중하 평균을 취수구로 변경해야 함) ○ 보 개방으로 낙동강 녹조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감된 취양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및 신속한 취양수 시설 공사를 실시하여야 함 - 부산시의 낙동강 및 4대강 수문개방 자연성회복 정책 수립 요구됨 - 부산시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한 보개방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함

	<p>○ 낙동강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돗물, 농수산물, 공기 등 전수 조사 실시 및 농어민 보상 체계를 마련함 - 수돗물 및 먹거리, 공기(에어로졸), 친수공간의 녹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조사 및 보개방 등 거버넌스를 구축함 - 정수원수, 농업용수, 레저활동 녹조독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먹는물과 물놀이 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함 <p>○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부산시의 상수원 수질 개선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는 낙동강 수계법을 개정 요구하여 물이용부담금으로 수변공간 확보함 -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함
--	---

7. 황령산 유원지 개발 철회

의제	황령산 유원지 개발 철회
소관위원회/담당부서	기획재경위원회·복지환경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도시계획국
현황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령산 온천개발 백지화 이후 절개지 복구 차원에서 2007년 조성된 스노우 캐슬이 영업 9개월만에 부도, 이후 방치됨 ○ ㈜에프엔인베스트먼트가 인수 (3개 회사가 주주로 참여설립) 사업의 공식 명칭 ‘황령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안) 2018년 시행사 부산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함 ○ 봉수전망대는 D사 2020년 황령산 정상부 23만2천㎡ 120m 전망대와 케이 블카 건립 제안함(105m 전망탑 500m 로프웨이) - 2008년 부산시 16억원 투입 봉수대 관광자원화 추진되면서 현재 도시계획 위 통과 및 환경영향평가 진행중임 ○ 2021년 8월19일 부산시-민간사업자 황령산 유원지 조성사업을 통한 부산 관광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함 ○ 부산시 2022년 9월 도시관리계획(황령산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함 ○ 23년 6월 현재, 산 중턱의 스키돔이 15년째 방치된 가운데, 이곳에 대규모 숙박, 호텔 상업시설이 추진 중임 - 8만㎡에 지하2층, 지상 8층 2개동으로 호텔 및 쇼핑몰, 8천억원을 들여, 복합휴양시설을 지어 심의가 진행될 예정임 - 사업체는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중임 ○ 기후위기 시대 도심 정중앙 녹지거점으로서의 황령산이 가지는 가치와 기능을 되외시한 채 시민의견 청취 및 찬반 논의없이 일방적 자연공공재를 개발 업체에 몰아주기로 진행함에 이에 대한 세밀한 규명과 특혜의혹을 제기함 ○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포레스트 관광 거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창출 등)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으며, 검증 장치가 없음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업체의 이익을 우선 하는 황령산 개발행정 폐기 - 황령산 보전과 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조삼모사식 행정에 대한 시민 질타가 필요하고 이를 노출시켜 시민 공분과 여론형성이 필요함 - 기존 황령산 순환도로와 3개 전망대만으로도 접근성과 야경을 비롯한 조망이 충분히 가능함 - 현재의 개발계획은 황령산의 생태경관 및 역사자원에 치명타를 줄 것임 - 환경훼손, 경관의 사유화 등 특정 개발업체의 이익확대를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최근 황령산 정상부 생태교란 외래침입 식물 6종의 발견과 터줏식물대의 훼손

	<p>손은 시작에 불과함. 나아가 별개로 진행중인 개발사업도 살펴 보아야 함</p> <p>○ 황령산 유원지 개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항상적으로 개발에 노출된 유원지로서가 아닌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요구됨</p>
비고	<p>○ 현재 계획대로라면 수용한계치를 넘어서는 탐방압을 비롯하여 대규모 구조물의 입지 과정과 전후에 탄소배출이 농후함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에 역행함</p>

8. 북항 제1부두 재개발과 유네스코 등재

의제	북항 제1부두 재개발과 유네스코 등재
소관위원회/담당 부서	건설교통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도시균형발전실 · 문화체육국
현황 및 배경	<p>○ 역사적 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 제1부두는 1876년 강화도 조약에 의해 개항되었고 이후 1898년에 부산 해관 매축공사 및 확장공사를 시초로 하여, 1902년에 약 13만6,77㎡를 매축함으로써 정차장, 세관, 우편국을 설치하고 매축항공사를 시작함 - 1905년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이후 일제가 항만과 철도 노선의 연결을 통해 대륙 침략의 거점이자 식민지 수탈품의 수송로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을 시작한 무역 항만시설임 - 한일합방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2년 6월 15일 준공되었고, 부산역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으며, 부산과 일본혼슈, 야마구찌현,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관부연락선 부두로 이용됨 - 한국전쟁 발발하자 유엔군이 부산항 제1부두로 입항했으며, 구호물자 및 군수물자들이 출입됨 - 1945년 8월 24일 원인을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의 목적지 역시 부산항 제1부두였으며 이전 수미르공원에 있던 위령탑은 강제동원역사관으로 이전된 상태임 - 우키시마호가 침몰한 일본 마이즈루는 지자체와 주민이 힘을 합해 우키시마호 추모공원을 조성함 (한국인 3,725명, 일본 해군승무원 255명 탑승 / 2014년 일본 외무성 기록 탑승자 8천여명이 넘었다는 문서가 공개됨) <p>○ 개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진 제1부두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2023년 2월 17일 발표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24호에 의하면, 6. 존치건축물 처리계획에서 1부두 창고는 부산광역시에서 역사공원 시설로 역사교육·문화 현장 등으로 활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p>○ 세계유산잠정목록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곳인 제1부두는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으로서 부산시가 2015년부터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고, 202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식 누리집에 최종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재됨 (부산일보 10월 23일자)
제안	<p>○ 현재 부산항 1부두에 건립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사업을 부산시는 폐기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오른 부산항 1부두에 도서관 건립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보류되고 당초 9월 11일로 예정되었던 기부자와의 기부금 약정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 부산시는 제1부두의 개발에 있어서, 역사적 관점에서 제1부두 전체를 이해해야 하며 무엇보다 작금에 회자되는 도서관건립 또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등의 난개발로 인해 역사적 문화자원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p>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구와 중구의회가 상권침해를 이유로 부산시가 추진하는 제1부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는 제1부두에 대한 복합개발과 문화유산등재의 경우 지역민의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중구 주민을 설득해야 함 ○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개최를 위해 북항 제1부두의 복합개발과 문화유산 등재 중 어떤 개발이 더 타당한지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부산항 제1부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우키시마호 사건을 비롯한 역사 콘텐츠 발굴에 부산시가 적극 나서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세계박람회를 통해 북항제1부두 세계문화유산 추진과 함께 우키시마호 추모와 기억의 공간을 조성하고 부산의 평화공간 자원을 묶어내는 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함 - 제1부두에 우키시마호 사건 등 역사 콘텐츠를 단순한 형식적 나열식이 아닌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과 적극 논의해 2030세계박람회를 통해 내·외국인들에게 추모의 공간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 - 일본 교토 마이즈루에서 보관중인 우키시마호 관한 사료를 부산시는 조사 및 발굴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아울러 강제동원역사관으로 이전된 위령탑 역시 현장으로 되돌아 와야 함 ○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시까지 유산의 보존을 위한 계획 수립 필요
--	--

9. 부산의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의제	부산의 난개발 극복을 위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소관위원회/담당부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도시계획국											
현황 및 배경	<p>○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기준 사전협상 적용 대상지 검토지역 -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 한진CY부지 (완료) 공공기여</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공기여</th> <th>용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법·기준</td> <td>2,362억 원-유니콘타워 설치비용 (토지가치 상승분에서 유니콘타워 건설비 제외)</td> <td>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td> </tr> <tr> <td>협상을 통한 추가</td> <td>약285억 원 (선하지 공원화, 주민편의시설, 수영강휴먼브릿지)</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공기여	용도변경	법·기준	2,362억 원-유니콘타워 설치비용 (토지가치 상승분에서 유니콘타워 건설비 제외)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협상을 통한 추가	약285억 원 (선하지 공원화, 주민편의시설, 수영강휴먼브릿지)			
	구분	공공기여	용도변경									
	법·기준	2,362억 원-유니콘타워 설치비용 (토지가치 상승분에서 유니콘타워 건설비 제외)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협상을 통한 추가	약285억 원 (선하지 공원화, 주민편의시설, 수영강휴먼브릿지)										
	- 기장군 일광면 일원 한국유리 공업지역 (협상진행중) 공공기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공기여</th> <th>용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법·기준</td> <td>(현금) 693억 원 (예비감정) (현물) 복합문화센터 부지제공 (10,705㎡) 갈매길 조성 (21,827㎡)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130면)</td> <td>일반공업지역 (91%) 외 -> 준주거지역 (91%) 외</td> </tr> <tr> <td>협상을 통한 추가</td> <td>(현물) 구역내 부지 추가 편입 공공보행로(선텐로드) 조성</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공공기여	용도변경	법·기준	(현금) 693억 원 (예비감정) (현물) 복합문화센터 부지제공 (10,705㎡) 갈매길 조성 (21,827㎡)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130면)	일반공업지역 (91%) 외 -> 준주거지역 (91%) 외	협상을 통한 추가	(현물) 구역내 부지 추가 편입 공공보행로(선텐로드) 조성			
	구분	공공기여	용도변경									
	법·기준	(현금) 693억 원 (예비감정) (현물) 복합문화센터 부지제공 (10,705㎡) 갈매길 조성 (21,827㎡) 공원 하부 주차장 조성 (130면)	일반공업지역 (91%) 외 -> 준주거지역 (91%) 외									
	협상을 통한 추가	(현물) 구역내 부지 추가 편입 공공보행로(선텐로드) 조성										
- 다대동 일원 한진중공업 및 성장기업 공업지역 (협상진행중) 공공기여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공기여</th> <th>용도변경</th> </tr> </thead> <tbody> <tr> <td>법·기준</td> <td>(현금) 1,275억 원(예비감정) (현물) 공공시설용지 부지제공 (7,942㎡), 공원하부 주차장 조성 (100면)</td> <td>공업지역-> 주거지역 84.9%</td> </tr> <tr> <td>협상을 통한 추가</td> <td>(현물) 구역 내 공원 (738㎡) 수리조선소 정비 (13,221㎡)</td> <td>상업지역 15.1%</td> </tr> </tbody> </table>	구분	공공기여	용도변경	법·기준	(현금) 1,275억 원(예비감정) (현물) 공공시설용지 부지제공 (7,942㎡), 공원하부 주차장 조성 (100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84.9%	협상을 통한 추가	(현물) 구역 내 공원 (738㎡) 수리조선소 정비 (13,221㎡)	상업지역 15.1%			
구분	공공기여	용도변경										
법·기준	(현금) 1,275억 원(예비감정) (현물) 공공시설용지 부지제공 (7,942㎡), 공원하부 주차장 조성 (100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84.9%										
협상을 통한 추가	(현물) 구역 내 공원 (738㎡) 수리조선소 정비 (13,221㎡)	상업지역 15.1%										
<p>○ 공공기여협상 대상지를 (준)공업지역으로 선정해 부산의 산업용지(준공업지역)이 줄어들어 지역의 일자리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토대가 축소됨 - 기업이 떠난 자리에 기업유치가 아닌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공공기여협상제가 이용됨</p>												
<p>○ 공공기여협상제의 협상과정에서 부산시의 사전 준비와 전문성 부족이 드러남 - 부산시의 앵커시설 도입 계획 부재함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여협상 개발계획, 공공기여계획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협의 등을 위해 전담 조직 설치, 필요시 전문인력 배치”할 수 있으나 부산은 서울의 ‘공공개발기획단’ 같은 조직 부재함 - 협상조정협의회에 경제 및 산업, 일자리 전문가가 부재함에 따라 부산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개발 계획이 아닌 주거시설(아파트) 중심의 개발만 추진됨 - 부산시 시설직 중 도시계획직 공무원은 10명에 불과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직 구조임</p>												
<p>○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 설치·운영기금 조례>에 따르면 공공기여금은 기금으로 조성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관</p>												

	<p>련한 구체적 계획이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개최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영강 휴먼브릿지 사업에 해운대 한진CY부지에 대한 공공기여금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못함 <p>○ 공공기여협상제 사업 추진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참여와 소통이 부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재송동 한진CY부지 협상 외 시민토론회 및 주민설명회 없이 일광 한국유리부지 및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의 경우 사업시행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제안서를 게시하고 협상 완료후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 형태로 게시하여 형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에 그침
제안	<p>○ 공공기여협상제 대상지 및 도입시설에 산업시설 유치, 일자리 창출 등 부산의 발전방향에 맞는 계획과 내용을 제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단에 경제와 산업 분야 전문가 참여 - 앵커 시설에 대한 세부 도입시설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p>○ 공공기여금 관리 운영방안 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공공기여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함에 따라 공공기여금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 추진비용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 <p>○ 부산시 공공기여협상 주무 부처의 전문성을 확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계 개편을 통해 도시계획부서, 일자리 및 산업 부서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함 - 공공기여협상제 담당 부서에 도시계획 전문화가 필요함 <p>○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무조건 용도변경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부산시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도시계획에 따라 공공기여협상제 추진 지역과 업체 선정이 필요함</p>

10.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 공원 보존

의제	이기대 공원 자연 생태 공원 보존
소관위원회/담당부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도시균형발전실
현황 및 배경	<p>○ 부산시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수립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3가지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대 자체가 되는 예술이 되는 공원, 자연환경 속에 녹여진 품격있는 미술관, 예술문화 콘텐츠가 축적되는 공원 - 오륙도에서 동생말로 이어지는 4.7km 해안산책로와 125만m²의 이기대 자연경관 활용하는 방안 모색 - 2024년말까지 문화예술인,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부산시민 의견 모아 기본계획 수립 예정 - 부산 오륙도 아트센터, 바닷가 숲 갤러리, 이기대 국제아트센터 등 다양한 의견 - 부산시 2030엑스포와 시너지 효과 기대 <p>○ 부산시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용역 수립 용역 진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2023년 9월 22일 ~ 2024년 9월 20일(12개월) - 금액 : 285백만원 - 내용 :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변경(수변공원→근린공원) - 수변공원 시설률 20%, 근린공원 40%까지 시설 활용 가능함 - 착수 보고회 : 2023년 10월 13일 <p>○ 부산시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737억원 들여 부지 매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문화재단 부지 약 32만 5천m²를 예상가 439억원보다 적은 350억원 매입함. 사유지 71만2천m²도 매입 <p>○ 이기대 공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7년 개방. 이전까지 군사시설 보호지역 - 수려한 해안경관 부산시민 많이 찾는 부산 시민 휴식공간 - 2013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선정. 부산 최고의 생태관광지 위상
제안	<p>○ 이기대 공원 자연생태 공원 보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공원일몰제 이후 개발 우려로 인해 시비 투입하여 이기대 공원 부지 매입함 - 당초 부산시민, 시민사회 이기대 공원 부지 매입은 이기대 공원을 부산 시민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시설물 건립은 아니었음. 부산시민 누구도 미술관 등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 - 각 지자체 주민들 여가 복지 문화 등을 위한 필요한 공공시설물 상당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음 <p>○ 부산 세계지질공원 지정 노력과 역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은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지질과학총회(IGC 2024)의 2024년 개최도시 선정. 부산시 IGC 총회 준비하면서 부산이 대도시 세계지질공원 성

	<p>공 모델로 만들자는 주장과 이기대공원 내 개발사업은 어울리지 않음</p> <p>- 부산시 부산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하지만 지질공원 지정과 개발사업이 어울리는지는 의문임</p> <p>○ 행정의 독단적 판단 결정으로 진행되는 이기대공원 내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으며 충분한 시민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p> <p>- 부산시는 현재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음. 무엇보다 주민 동의 합의 절차 없이 추진하고 있어 비민주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반드시 시민동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 거쳐야 함</p>
--	---

11.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부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

의제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부산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마련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건설교통위원회/교통국
현황 및 배경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산시 대중교통혁신안 발표(202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야 12개 과제 - 대중교통 통합할인제, 어린이 요금 무료화, DRT 도입,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 MaaS 도입 등 2) 부산 대중교통요금인상(202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금 인상 결정(2023.08) : 시내버스 1550원, 도시철도 1600원, 마을버스 등 3) 동백패스 시행(2023.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45,000원 이상 이용자 최대 90,000원까지 초과 이용금 동백전 환급 - 부산시 : 8월과 9월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통행량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6%, 5.49% 상승. 환급금 25억원 4) 부산시 빅데이터 기반 노선개편 2025년 1월 시행 목표로 준비중 <p>○ 부산시 대중교통정책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분담률 정체 : 2008년 이후 40% 초반 유지. 시내버스 감소 추세, 도시철도 상승 - 승용차 중심정책 : 도로, 대심도, 터널 등 승용차 중심 이용 정책 줄곧 시행 - 대중교통요금인상 : 시민 협의 소통 미흡. 시민참여 및 관심도 정책 부재 요금인상 폭에 대한 시민체감도 높음 - 동백패스 : 정책방향 및 과제 명확성 부족 대상자 등 보편성 부족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제고 한계
제안	<p>○ 대중교통수송분담률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신규 수요 창출 확보 - 수요응답형 버스 확대 <p>○ 시민중심 및 효율적 노선 개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차간격 축소, 장대노선 축소 - 시민중심 노선개편 민관협의 기구 구성 <p>○ 편리한 환승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스테이션 및 복합환승센터 확충 <p>○ 동백패스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카드 발급, K패스 상호 정책적 기술적 연관성 확보 <p>○ 강력한 교통수요관리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금지 조정, 주차요금 인상 등 할인주차제도 폐지 - 혼잡통행료 징수 등

12.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백전 예산 확대

의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동백전 예산 확대
소관위원회/담당부서	기획재경위원회/디지털경제혁신실
현황 및 배경	<p>○ 정부의 2024년 지역화폐관련 예산 전액 삭감 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2023년 지역화폐 예산 1030억 원임 (2022년대비 53% 삭감) - 동백전 가입자 100만 명 이상, 2022년 12월말 기준 개인택시를 포함한 동백전 가맹점 수 142,703개임 - 동백전은 잦은 운영대행사의 교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액이 2020년 1조 3,063억 원, 2021년 1조 6,770억 원, 2022년 2조 6,270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 동백전은 충전한도와 캐시백이 줄어들면서 전년대비 사용금액이 2023년에는 50%이상 감소 추세이며 부산시에서 캐시백 차등 지급 및 동백플러스 가맹점 모집을 통해 동백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나 동백플러스 가맹점 모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비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되겠지만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의 전액 삭감은 유일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외면하는 것으로 보임 <p>○ 동백전은 지역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부산 동백전 성과분석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여효과 분석에 따르면 동백전은 지역순환 효과 1조 2,672억 원 동백전 발행을 통해 창출된 부산의 경제적 편익은 약 5,155억원으로 추산됨 (투입 대비 소득 창출 비율이 2.56배) - 부산시는 동백전 카드 발급기관 4개 사(부산은행, 코나아이, 하나은행, NH농협은행)로부터 지역 재투자 후원금 11.6억원 전달 받음. 향후 매년 결제금액의 0.06%를 적용한 금액으로 협약을 통해 지역재투자 후원금 전달받을 예정임
제안	<p>○ 부산시 동백전 시비 예산 최소한 2023년 수준으로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백전의 지역순환 효과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시비 예산을 2022년 동일 수준으로 확보해야 함 <p>○ 동백전 운영의 구조개선을 통한 지속가능 자생적 구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과의 중층구조 도입 등 동백전 운영의 구조개선을 통해 예산 확보 - 적극적인 동백플러스 가맹점 모집 <p>○ 카드제휴사 결제 수수료 환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카드사는 동백전 사업의 주체가 아님에도 보장된 수수료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지역화폐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운영관리비와 최소한의 이익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함 <p>○ 각종 정책수당을 동백전으로 지급하여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를 적게 받는 역진적 구조를 개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시백 외 지역의 공동체를 되살려 상호 신뢰와 상호 부조를 통해 공급과 돌봄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동백전 활용 <p>○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치권 등 긴밀히 협조 추진하여 국비 확보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전국 시·도가 연대하여 중앙과 대응해야 함

13. 산업재해 ·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의제	산업재해 · 중대재해 없는 부산 만들기
소관위원회/담당부서	행정문화위원회 / 행정자치국
현황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건설현장 등 산업재해 사망 및 안전사고 지속적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자 102명, 사고사망자 59명(이중 50인 이하 사업장 48명, 50인 이상 11명) - 부산지역 지속적 산업현장에서 사고 사망자 발생.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 다수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 필요성 증대 - 지난 7월 부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첫 재판 - 산업재해, 중대재해 사고 조사(수사), 기소 더딤 ○ 부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 운영 중(2021.05 제정) - 부산시 :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확보, 사업장별 유해 위험 요인 확인개선,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 부산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민선9기 부산 시정 노동인권 정책 발전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노동안전보건센터 추진 3년. 구체적 계획도 못 세워 - 예산 부족 이유. ‘노동인권’은 부산노동권익센터에, ‘보건’은 공공병원 등 추가하는 형태로 방향 선회. 특히 ‘보건’ 기능 여전히 담보 상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적 역할 매우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노동 안전 사고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 등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 ○ 현정부 중대재해 자율규제와 처벌 완화 기조 ○ 경제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지속적 주장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및 노동자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보급 -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 등 - 센터 운영을 민관 거버넌스 형태로 구성운영 -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대비 ○ 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내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 - 중대재해 조사 시민 및 안전관리에 노동자 참여 보장과 지방 정부 감독 강화 -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시, 공공기관, 사업주단체, 노동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4. 부울경경제동맹 성공적 안착을 통한 부울경메가시티 실현

의제	부울경경제동맹 성공적 안착을 통한 부울경메가시티 실현
소관위원회/담당부서	행정문화위원회 / 행정자치국
현황 및 배경	<p>1.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 계획</p> <p>1) 추진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추진단 출범. 2023.03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자문단 구성 운영. 2023.07 ○ 부울경 정책협의회 2023.07 <p>2)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계획 수립 2023.0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 지방시대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 ○ 추진과제 : 3대 전략, 12개 핵심과제, 69개 실천과제(총 사업비 41조) <p>2.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계획</p> <p>1) 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합 논의 인지 여부 : 비인지 68.2%, 인지 31.8% ○ 행정통합 찬성/반대 : 반대 45.0%, 찬성 33.6% ○ 행정통합 찬성 이유 : 수도권 집중 대응 국가균형발전 55.6% ○ 행정통합 반대 이유 : 통합 필요성이나 당위성 적음 50.3%. 실현가능성 낮음 22.9% 등 <p>2) 이후 추진 계획(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교류 및 민간협력 확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협력과제 발굴 및 현안 해소 추진(국비확보, 정부 계획 반영 등) - 부산-경남 현안 협력회의 신설 운영 - 시도지사 교차 근무(1일 명예 시도지사 등) - 각종 행사 시 시도 민간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 ○ 경제동맹 내실화를 통한 협력사업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광역권 발전계획 기반 협력 사업 다각화 ○ 행정통합 민관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합 민관추진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 행정통합 여론조사 실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인식 확대 및 시민 인식 조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및 초광역협력 사업 이해도 제고 필요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법적 지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대안 방식으로 규정 필요. 중앙정부 협력 지원 용이 - 부울경 3개 광역단체, 정치권, 시민사회 등 협력 추진 ○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성공을 위한 상생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보, 이해 타협 자세 필요. 이익 공유 원칙 기준 마련 - 부울경 3 ○ 부산경남 행정통합 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서 진행한 행정통합 여론 조사 결과 바탕으로 과연 이 사업 추진 타당한지 의문

15.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의제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소관위원회/담당부서	기획재경위원회 / 디지털경제혁신실
현황 및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지난 9월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3년에서 1년 조정 의견 시의회 제출 ○ 부산시의회 제 316회 임시회(9월 19일)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 민간위탁 중단, 공공위탁(부산경제진흥원) 전환 검토 후 재 상정 결정 ○ 사회적경제기업 당사자 조직들 민간위탁 부결에 대한 입장 발표 - 부산시의회 결정 납득하기 어렵고, 지난 3월 비상경제대책회의 약속 이행 등 ○ 부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요 활동 현황 - 근거 :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2018년부터 민간위탁 2023년 6년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지양하고 간접지원 형태 사업비 운영해옴. 사업비 지원 부분 역시 기업 선정 과정 및 지원금액 확정시 SVI 측정 결과를 활용하도록 2024년 센터 사업 계획에 반영하였음 - 지난 6년간 주요 성과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지원(474회, 43,260천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참여기업 858개 기업, 937,971천원) : 사회적경제 시민 상담(99,599건) ○ 부산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발표(2023년 4월12일) - 2023년 ~ 2027년. 총 예산 1,289억원 투입 -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확대(예산 57.9억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업무 통합 및 지역거점센터로서 기능 강화하여 사회적경제육성생태계 조성 ○ 부산시 비상경제대책회의(2023년 3월 22일) - 사회적기업 2,100개 육성(2022년 1495개), 규모 6,000억원 규모 확대 목표 -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플랫폼을 강화하고 공공 구매를 활성화하는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 - 복지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특화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5년 동안 1,194억원 투입 계획 ○ 윤석열 정부 2024년 사회적경제 예산 대폭 삭감 - 직접지 전액 삭감, 간전비 일부 보전 - 전국 사회적경제 단위 연대. 예산 복원 사업 진행 중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추진 - 민간위탁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복귀. 위탁기관 책임경영 위해 3년 기간 필요 -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당사자 기관, 시민사회 등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재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 기조 부합 -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가치 증명과 개선 프로그램 운영 -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및 판로지원 사업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지원 프로그램 지양 ○ 2024년 정부 사회적경제 예산 복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시의회 차원 노력 - 부산지역 사회적경제 당사자 기관, 시민사회 등 협력
--	--